

1. 의사표시해석에 있어서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를 상대방이 안 경우, 의사표시는 표시행위로부터 추단되는 효과의사를 기준으로 하여 해석하여야 한다. ()
 2. 매도인이 자기소유의 X토지에 대하여 매수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X토지의 지번 등에 착오를 일으켜 Y토지에 관하여 매수인명의로 이전등기를 해 주었다면 Y토지에 관하여 경료된 이전등기는 유효하다. ()
 3. 진의 아닌 의사표시는 내심적 효과의사와 표시상의 효과의사가 불일치하는 상태이므로 그 효력은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
 4.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있어서의 ‘진의’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한다. ()
 5. 전체 공무원이 일괄사표를 제출함에 따라 공무원 甲도 함께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甲의 내심의 의사는 사직할 뜻이 아니었으므로 사직서의 제출은 무효이다. ()
- * 甲은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乙과 짜고 허위로 토지를 양도 하였다(6~8).
6. 가장매매는 불법에 해당하므로 甲은 乙에게 그 토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
 7. 乙이 토지를 선의의 丙에게 이전하여 주었으나 丙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
 8. 위 6에서 선의의 丙이 악의의 丁에게 양도하였다면 丁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
 9. 착오로 인한 취소는 당사자의 약정으로 배제할 수 없다. ()
 10.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법률행위를 취소하기 위해서 동기를 의사표시 내용으로 하는 합의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11. 착오로 인한 취소는 표의자의 주관적 이익을 보호하는 제도이므로 표의자의 경제적 불이익은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의 판단에 고려되지 않는다. ()
 12. 매수인의 중도금 미지급을 이유로 매도인이 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후라도 매수인은 착오를 이유로 그 계약 전체를 취소할 수 있다. ()
 13. 중요부분의 착오에 의하여 하자가 있는 부동산을 매수한 경우, 하자담보책임이 성립하는 범위에서 착오에 의한 취소는 인정되지 않는다. ()

14. 법률행위의 외형만 존재할 정도로 표의자 스스로 의사결정 할 여지를 완전히 박탈한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무효이다. ()
15. 교환계약시에서 시가에 대한 묵비는 부작위에 의한 기망에 해당한다. ()
16. 대리인이 기망을 한 경우에 표의자는 본인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다. ()
17. 소송행위가 강박에 의한 것이라면 이를 취소할 수 있다. ()
18. 제3자의 사기로 인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손해를 입은 자가 제3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매매계약을 취소하여야 한다. ()

매일정리노트(O, X) 정답

1. (X) 진의를 알았다면 내심상의 효과의사를 기준으로 한다
2. (X) 오표시무해의 원칙에 관한 내용으로 X토지에 대하여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으므로 Y토지의 등기는 무효이다
3. (X) 비진의표시는 원칙적으로 유효이다
4. (O)
5. (X) 공법행위에는 비진의표시가 적용되지 않고 표시된대로 효력이 발생한다
6. (X) 가장매매가 불법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므로 불법원인급여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소유권은 甲에게 있으므로 甲은 乙에게 그 토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7. (X) 보호되는 제3자는 선의이면 충분하고 무과실까지 갖출 필요는 없다. 따라서 과실이 있는 제3자라도 선의라면 권리를 취득한다
8. (X) 丙이 선의의 경우, 전득자인 丁은 선악을 불문하고 취득한다
9. (X) 착오에 관한 규정은 임의규정으로 당사자가 이를 배제하는 특약을 할 수 있다

10. (O)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기 위해서는 동기가 표시되어 법률행위의 내용이 되면 충분하고 당사자의 합의까지는 필요하지 않다
11. (X) 경제적불이익이 없는 경우에는 중요부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12. (O) 해제를 당한 매수인은 손해배상 등의 불이익을 면하기 위하여 이미 해제된 법률행위라도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13. (X)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 매수인은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이 성립하는지와 상관없이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14. (O) 강박에 의하여 의사결정의 자유가 제한되는 정도는 취소사유이나 의사결정의 자유가 박탈 또는 상실된 경우에는 무효가 된다
15. (X) 침묵에 의한 기망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고지의무가 있어야 하므로 고지의무가 없는 경우에는 기망에 해당하지 않는다
16. (X) 대리인은 본인과 동일시하는 자이므로 제3자의 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본인의 선악과 상관없이 표의자는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다
17. (X) 공법행위나 소송행위는 표시하면 유효가 되며 이를 취소할 수 없다
18. (X) 취소하지 않고도 불법행위에 위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